

檢, 식당 결제는 왜?... '돈봉투' → '불법 정치자금' 확대 조짐

검찰, 9400만원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중 '먹사연 후원금 전당대회에 사용' 정황 포착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대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별건의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당시 송영길 캠프가 통일부 소관 법인 '먹고사는문 제연구소(먹사연)' 자금을 당대표 선거에 사용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당초 검찰 수사는 2021년 전당대회 9400만원 살포 의혹에 집중했으나,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이 전당대회에 쓰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급격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먹사연이 외곽 후원조직의 기능을 했다고 본다. 먹사연이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경선캠프에서 컨설팅업체 A사에 지급해야 할 9000만원대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사무기기 대여비 1000만원도 대신 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9400만원뿐만 아니라 컨설팅·장비 대납 비용 1억

원 가량 등 총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이 조성·사용됐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자금 사용처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지역본부장들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식사를 대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의도 일대 식당들의 카드 결제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먹사연 자금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유권자 식비로 쓰였다면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송 전 대표 측은 본건 수사와 관계

없는 "별건의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앞선 수재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돈봉투 의혹' 수사로 변질 데 이어 추가적인 정치자금 수사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송영길 캠프에 어떤 자금이 유입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안 본질이고 수사의 핵심"이라며 "돈봉투 공여자 수사의 일환으로, 별건수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근 먹사연 회계담당자 박모씨와 컨설팅업체 A사의 대표 전모씨를 불러 대납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컨설팅업체에 맡긴 연구용역은 전당대회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전당대회와 시점이 크게 다르다"며 "먹사연이 캠프 식비를 대납한 적도,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사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직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할 이유가 없었다. 상대 후보 측에서 먼저 봉투를 돌려서 우리도 돌려줬다고 하는데, 경쟁 후보의 매표 정황이 파악됐다면 바로 고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을 계속 하면서 정치자금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수자로 특정되는 민주당 의원 약 20명과 송 전 대표를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윤·이 의원부터 불구속 기소하거나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이승기자



'2023 제주차별철폐대행진'

제주도 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3 제주차별철폐대행진단'이 18일 오전 제주시 일도동에서 행진하고 있다.

광주 월출교차로에 꼬마(?) 신호등 설치한 이유는

교차로 상공 특고압 전선 영향... "시인성 저하" 불만도 광주시 "현장 여건 고려 가장 낮은 신호 시설 설치"

광주 북구 월출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에 비해 키가 낮다. 이 곳 신호등은 왜 꼬마신호등일까? 그 답은 교차로 상공에 숨어 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일반도로 내 운전자동 신호등의 배심목(세로형 지주)은 6m, 신호등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보통 4.5m이다. 그러나 월출교차로 내 운전자동 신호등의 배심목 높이는 4.5m에 불과하다. 교차로 주변 보행자용 신호등의 배심목 높이 또한 일반적 기준인 2m50cm에 미치지 못한다. 교통 안전을 고려, 별도로 설치한 세로형 운전자동 신호등의 높이도 2m 안팎이다.

이처럼 신호등 시설을 낮게 설치한 이유는 교차로 상공을 지나는 특고압 전선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2011년 월출교차로 개통 당시에는 운전자동 신호등의 배심목 높이를 6m로 했다. 이후 생각치 못한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신호등 제어할 그늘막 현상이나 신호등 꺼짐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교차로 상공 특고압 전선의 영향으로 보고 개선책을 찾던 광주시는 신호등 시설의 높이를 낮추기로 결정, 현재의 높이로 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월출교차로 주변에 진곡산단로가 개통하면서 이 계획안도 무산됐다. 기존 대비 교통량이 3배 가량 늘어 회전교차로 만으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신호등 시설의 높이가 너무 낮아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호등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 여건을 최우선 반영하는 것"이라며 "교차로보다 특고압 전선 철폐가 먼저 설치돼 광주에서 가장 낮은 높이의 신호등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새벽 원룸 건물 화재...신속 대피로 인명피해 없어

이른 새벽 도심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으나 발 빠른 대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남 여수시 미평동 4층 규모 다세대 원룸 주택 건물 내 4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1분 만에 꺼졌

다. 이 불로 건물 내 15가구에 살고 있던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가전제품을 비롯한 실내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불이 난 집에는 건물 소유주 가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화재 직후 일일이 입주민

을 깨워 대피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세탁기·김치냉장고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현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